농업인 월급제 7월 시행… 호응 얻나

도, 농가 가계부채 해소 위해 내년 2월까지 시행키로
농협 출하약정 체결 농업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인 소비로 농가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협은 조천·한경·고산·중문 농협이며, 지원 대상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시행 품목은 감귤·만감류·브로콜리·마늘·월동무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이자 대출 성격을 갖고 있어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미리 받는 월급이 빚으로 남을 수 있어 농가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는 농민들의 외면으로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농민 1만2000여명의 0.5%에 불과한 67명에 그쳤고 서산시 역시 0.4%에 머무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호응이 낮자 이들 지자체들은 이 제도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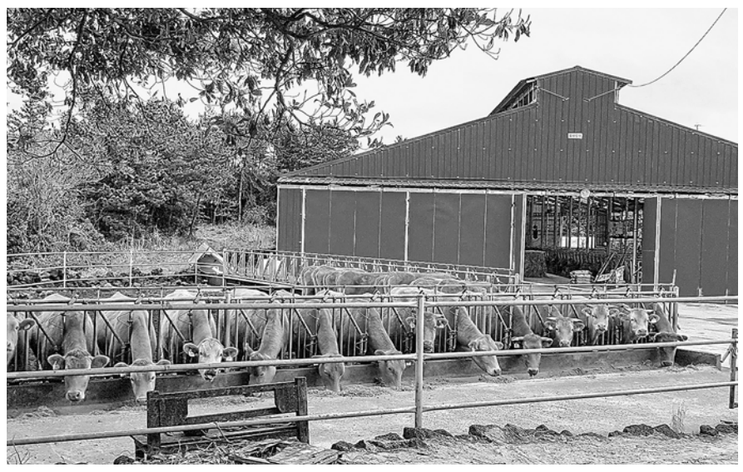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작물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 시행 시 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에서는 농협에서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깨끗한 축산농장' 100곳까지 늘린다

서귀포시, 현재 24곳에서 2025년까지 확대 목표 설정
농림부 최종 검토 후 지정

지정시 인센티브 우선 지원
컨설팅·사후 관리 등 제공



서귀포시가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1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귀포 지역내 깨끗한 축산농가로 지정 받은 한우 사육 농가.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CLF·Clean Livestock Farm)'을 100곳까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3개소(한우 2·양돈 11)를 추가 발굴해 청정제주와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2017년부터 추진된 서귀포시 지역의 '깨끗한 축산농장'은 현재 24개소(한우 6·양돈 16·닭 2)가 지정돼 있는데, 2025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 주변경관과의 조화, 신속·적정한 가축분뇨의 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축사·안전한 축산물·쾌적한 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지정된 농장들은 축산사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며, 자조금 지원, 컨설팅과 사후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절차는 소·돼지·닭 사육농가 중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로서 서귀포시(축산과)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농가 평가는 한·육우와 젖소의 경우 축사 바닥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돼지와 산란계·육계는 축산 악취 및 경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정은 서귀포시에서 서류심사·현장평가 진행,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된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축산업등록 농가는 한·육우 및 젖소 322호, 양돈 81호, 양계 23호로 집계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9일은 '구강보건의 날' 치아 건강 함께 지켜요"

서부보건소 주간행사 다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오는 9일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제74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을 주제로 다양한 주간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구치)의 구(臼)를 숫자 9로 바꿔 제정한 기념일이다.

민속오일장 건강체험홍보관에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을 주제로 ▷구취 측정하기 ▷전문가 칫솔질 교육 ▷칫솔과 치간칫솔 배부 ▷충치·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양치용액 배부 ▷금연클리닉 등록과 상담 ▷일산화탄소와 폐활량 측정 ▷음주선별검사와 가상음주 고글체험 ▷짠맛 미각테스트 ▷레드서클 존을 운영한다.

또 '이튼튼 몸튼튼 건강교실'과 '양치교실'을 운영해 아동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교습, 불소용액양치 실시 지도, 구강보건교육, 치태검사 및 1:1 양치질 교습, 불소도포 등을 통해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로당에서는 구강건조증 예방과 올바른 틀니 관리방법,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바니쉬 도포, 입냄새 측정 등 구강건강 관리법 교육과 구강관련 배너를 전시해 올바른 회전법 칫솔질을 홍보하고 있다. 문의 760-6221.

문미숙기자

원룸·다가구주택 찾기 쉬워진다

도, 동·층 등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접수 2938동 처리 완료
우편물 분실 등 피해 줄듯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이 잦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부여되는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주와 임차인 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해달라는 신청 등에 따라 293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이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9318동에 대해서도 건물주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직권 부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은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시 거주자의 '주소정정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로 전달해 주민등록표에 등록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내 식당 창업 꿈에 도전하세요"

LH-제주올레,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가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의 4기 참가자를 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juolle.org)에서 이달 1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고 (사)제주올레 주최, 사회적기업 (주)오요리아시아가 주관한다.

4기 참가자에게는 '로칸다 몽로', '광화문국밥'을 운영하며 '글 쓰는 요리사'로 알려진 박찬일 셰프가 이끄는 메뉴 개발교육을 포함해 홍보마케팅, 회계, 투자자 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이 7월 한달간 제공된다. 또 교육기간이 끝나면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서귀포시 중정로 22) 1층 식당 공간에서 실제 요리를 내보고 소비자와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도록 팝업 레스토랑 '청년올레식당' 운영 기회가 8~9월 두 달간 제공된다.

신청은 (사)제주올레 홈페이지 올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달 14일(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주)오요리아시아 070-4264-9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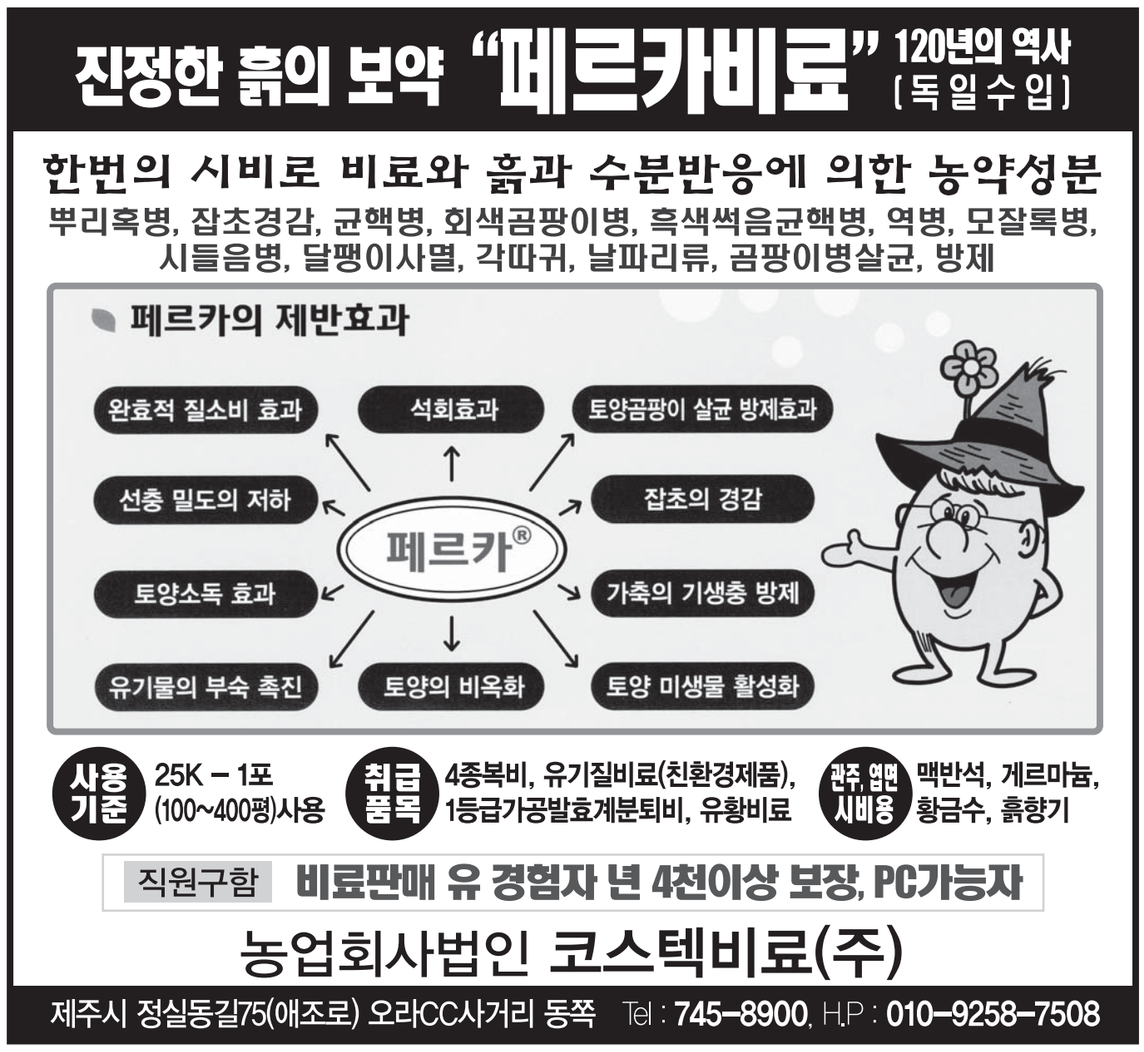
문미숙기자

세정 업무 민원 해결 추진
제주시, '워킹그룹' 운영

제주시는 세정 업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 불편 사항을 과제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주 1회 업무시간 후 세무과 회의실에서 직원 간 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워킹그룹은 지난 5월까지 총 8회를 운영, 24건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 과제는 농지 취득세 감면 운영, 이혼 시 세율 특례 적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적용, 연부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토론 과제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제도개선토론 과제로 제출했으며 이 중 2개는 지방세법 개정 대상으로 채택돼 검토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